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김 동 춘*

1. 머리말

4·19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변혁운동으로서의 측면과 학생운동으로서의 측면이 그것이다. 4·19는 분명히 제1공화국의 반민주적인 정치에 대항하여 발생한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의 전면에서 나서서 운동을 발전시키고 운동의 이념을 제시한 주체는 학생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대학교수단 및 언론인을 비롯한 지식인의 역할이 컸다고는 하나, 그들은 학생들이 쟁취한 성과를 확대·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을 따름이며 독재체제의 예봉에 맞서서 선도적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50년대의 과잉도시화의 결과 도시에 퇴적된 많은 하층노동자, 빈민, 거리의 부랑아들이 4·19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당했다고 하나, 그들은 독자적 조직으로서 운동의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심대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킨 4·19의 분명한 담당자였다. 사회구조적

*김동춘(金東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모순이 학생들의 봉기에 의해 표출된 사실, 그것이 4·19의 진면목이자 4·19를 배태시킨 한국사회구성체의 총체적인 특징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4·19와 학생운동으로서의 4·19, 즉 4·19의 양면성이야말로 4·19의 진정한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전제인 것이다. 누구든 4·19를 학생운동의 측면에만 국한시켜 보려 하지는 않지만, 학생이 주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만 4·19를 파악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학생운동도 순수하게 학생 자신의 존재 조건의 문제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경우는 없다. 1960년대 말 미국과 유럽에서 몰아친 급진적 학생운동은 서구 자본주의사회의 모순, 그 문화적 정당성의 위기에서 파생된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남미, 제3세계의 학생운동도 그 나라의 후진적인 사회·경제적 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학생운동이 정치권력 자체의 전복과, 사회의 총체적 변혁의 임무를 자신의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분단된 반쪽에서의 변혁운동과 그 속에서 차지하는 학생운동의 지속적인 비중에 대한 재평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분단 이후의 이러한 전통의 원류를 4·19 학생운동에서 구할 수 있다. 4·19에 대한 재평가의 문제는 한국사회구조의 해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이 글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4·19 이후의 약 30여 년의 기간은 사실상 4·19의 객관적 의미가 부각되어 온 과정이었다. 이제 양식있는 지식인이라면, 또 변혁운동에 실천적 문제의식을 가진 활동가라면 더 이상 4·19에 대하여 '불의에 대한 저항', '독재에 대한 거부', '양심의 승리' 등의 4·19 직후에 품어왔던 용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운동도 발전했고 우리의 문제의식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반독재, 자유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한 부르조아적 민주변혁운동의 틀로서 4·19를 이해하려 했던 시도가 많이 있었으나, 이들 시도는 모두 아직도 식민지의 잔재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분단국가인 남한에서 어떻게 순수 부르조아민주변혁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결여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가 시야를 남한사회에만 국한시킨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남단의 사회변혁, 민주화의 과제는 식민지, 8·15 해방, 분단에 이르는 한반도 전체사의 시점에서 접근되지 않으면 그 진로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즉, 4·19학생데모라는 현상형태로의 '표출'은 저류에 흐르는 사회구조의 총체적 모순의 직접적 반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도 학생자신의 존재조건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앞서 언급하였지만, 학생운동에 관한 과학적 접근도 이제는 변혁운동의 주체형성의 문제와 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자각되어 가고 있다. 학생 일반이 갖는 특성, 학생운동 일반이 갖는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는 물론 1차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국사회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위치, 변혁운동의 주체형성의 측면에서 학생운동이 갖는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1980년대 초반 이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논쟁은 4·19학생운동에 대한 재접근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6·25이후 남한 학생운동의 원류는 4·19에서 찾을 수 있으며 4·19 학생운동은 이후의 학생운동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의 학생운동가 역시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4·19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학생운동이 4·19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학생운동이 사회의 변혁적 과제에 처한 맥락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4·19학생운동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학생운동의 진로모색을 위한 전제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전체 변혁운동의 진로 및 그 토양으로서 한국사회의 객관적 특성에 대한 해명작업의 일환으로도 적극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2. 4·19의 객관적 조건과 운동의 전개과정

(1) 사회·경제적 조건

50년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단독정부 수립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은 첫째로 새로운 식민지적 지배질서로의 편입 —— 혹은 분단

국가의 성립——을 통한 식민지적 사회경제구조의 온존, 타협적 재편 및 그 결과로서의 (반)봉건적 제관계의 온존과 부르조아변혁의 좌절이며, 둘째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6·25전쟁의 결과 국내의 계급관계가 친미·보수 엘리트 중심으로 현저히 역전됨과 동시에 민족민주운동이 정치의 장에서 배제되어 버린 것이다. 즉 사회·경제구조의 신식민지적 질서로의 재편, 분단국가의 조건이 초래한 변혁운동세력의 완전한 거세가 6·25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를 규정했다.

미국과 UN의 주선으로 성립된 분단국가는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와 국내의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부분적·타협적 재편——특혜적 귀속재산불하, 미봉적 토지개혁이 그 구체적 정책이다——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식민지시대에 강대해진 억압적 국가기구를 파손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여 활용하였다.

원조를 매개로 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신식민지 지배국가와 피원조국의 관료·자본가간의 야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배블록의 저편에는 신식민지 국가의 광범위한 피지배계급이 몰락의 길을 걸어 가게 된다. 미국은 이 원조의 제공 시기, 액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강한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국내의 예속관료, 자본가들은 미국의 원조에 자신의 생명줄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원조의 사회경제적 결과는 첫째로 한국사회에 자본주의적 축적과 발전을 야기하고 가속화시켰으며, 둘째로 독점자본가 및 자본가계급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세째로 해방운동의 객관적 역량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원조를 기반으로 한 신식민지적 지배질서는 일정한 자기모순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원조의 과다지출에 의한 미국경제의 위기, 즉 세계자본주의의 자기모순에 의한 원조의 불가피한 감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신식민지 지배질서는 신생국가의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과 국내 재생산기반의 확충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독점자본 진출의 전사(前史)로서의 원조가 갖는 일반성과 부합한다.

따라서 원조의 격감은 기존의 신식민지 지배질서에 일대 타격을 줌과 동시에, 새로운 지배질서로의 재편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원조에 의존하는 국내 사회경제체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순을 확대재생산하게

된다. 신식민지적 국가기구의 매개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도입과 생필품의 독점가격형성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극도의 빈궁에 빠뜨리고, 결국 이들 농민을 도시의 반프롤레타리아층으로 퇴적시킴으로써 도시에서의 실업, 빈곤, 과잉인구 현상을 유도한다.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점자본은 국가권력의 자원배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본-임노동관계 외의 경제외적인 사회·정치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자본을 끊임없이 재투자함으로써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상업부문에서의 폭리 및 원조의 특혜적 배분에 의해 자본축적을 이룩하는 까닭에, 결과적으로 생산력의 발달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1950년대 말 원조삭감의 여파로 국내 생산시설의 유희상태(특혜적 부분의 과도한 자본투자에 의한 과잉생산)와 실업률의 증가가 현저해졌고 농민, 도시빈민, 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민중들은 현실에 대해 극도로 불만을 안게 되었다.

단독정부 수립, 6·25전쟁을 통하여 극우 친미엘리트, 대지주, 소극적인 민족운동가 및 친일관료들의 일방적인 계급지배가 관철되는 마당에서 정치의 장은 이들 내부의 균열에 의한 무이념의 보수정당 일색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이들 내부의 권력투쟁과정에서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신흥 자본가, 친일관료들의 헤게모니가 보장된다. 이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는 신식민지적 지배질서가 보장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위약하기 짝이 없었으나, 이들에게 적대적인 민중세력이 정치의 무대에서 거세된 까닭에,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기형적인 정치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들 정치권내의 헤게모니그룹은 원조의 특혜적 배분과 민중의 수탈에 그 물질적 기반을 갖고 있었으므로, 원조의 삭감은 이들 내부의 분열(50년대 말의 자유당 강경파의 득세)을 가속화시켰고, 권위주의적 통치의 비민주성은 도시 중산층, 지식인들의 불만을 가중시켰고 체제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변혁운동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마당에 민중들의 사회변혁에의 열망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정치참여 통로인 선거를 통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 자체는 미국에 의해 형식으로만 도입된 부르조아 질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그것의 형식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입각해서 주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선거

제도는 역설적으로 지배집단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게 되었다. 1956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는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의 변혁의지는 기실은 민중들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의 표현이었다. 1960년 3·15선거 직전에 형성됐던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선거를 통한 야당의 승리와 이승만의 퇴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사회질서에 대한 회구가 응축된 것이었고 그것이 지배집단의 폭력적 선거조작에 의해 좌절되었을 때 그 불만 또한 단순한 선거부정에 대한 비난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4·19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촉발된 까닭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53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기간은 매우 짧은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에의 욕구와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의 객관적 요청이 폭력적으로 저지되고, 민족해방운동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된 까닭에 1950년대 말의 위기는 단순히 50년대의 구조적 모순의 반영이 아니라 근대 100년사의 총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19의 배경은 크게는 민족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오지 못한 채 식민지·신식민지 지배질서에 편성, 재편성되어 온 근대사의 외적 모순에서 구해질 수 있고, 분단 이후 형성된 국내 매판세력과의 내적 모순에서도 구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4·26 이후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1) 학원민주화로의 후퇴

‘부정선거규탄’으로 출발한 4·19는 부정선거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이승만과 자유당의 실각만으로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임에 분명하지만, 4·26 이승만 하야는 운동의 종결이 아니라 운동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이후의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학생운동의 전개는 4·19의 진정한 배경이 이승만의 독재가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변혁의 요청이었다는 사실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뚜렷한 지도이념과 지도핵심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고양된 4·19학생운동은 이승만과 자유당이라는 가시적 대상이 제거되자, 투쟁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들은 독재정권의 타도라는 정치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면서도 ‘학생은 학원으로’라는 구호를 별다른 모순을 느끼지 않은 채 받아들였고, 4·19를 이승만의 하야에만 국한시키기를 원하는 보수정객, 언론의 설득에 쉽게 말려들어 갔다. 따라서 독재정권을 타도한 학생세력은 4·26 이후 지속적 정치변혁에 관여하기보다는 학원의 민주화에 자신의 임무를 국한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학원민주화운동은 주로 식민지권력에 아부하거나, 자유당 권력에 편승한 어용학자, 사이비 학자의 퇴진, 학교 행정상의 민주화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학원도 사회의 한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의 모순적결은 사회개혁의 일부분이자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제영역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당시 한국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정치권력을 문제삼았던 학생들이 학원문제로 자신의 과제를 국한시킨 것은 엄청난 운동의 후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운동의 개량화 — 국민계몽운동, 신생활운동

5월 한달을 학원문제 시비로 보낸 학생들은 4·19에서 그들이 주장한 정치변혁의 요구는 학원민주화운동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기에 이르렀고,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그들의 활동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국민계몽운동, 신생활운동, 7월 총선에의 참가운동은 학생들이 시야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시키면서 전개한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게 된 데는 ‘민주주의는 제도의 개선만으로 성취될 수 없고 정치에 참가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고양,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량주의적 사회인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국민계몽대는 ‘4월혁명정신의 보급, 국민 정치의식과 주권의식의 고양, 경제복지의 추구, 신생활체제의 수립, 민족문화의 창조’를 그 강령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유당시대의 부패와 부정은 특정 정치인의 도덕적 타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신자세의 해이에 원인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신생활운동은 양담배소각, 사치추방캠페인, 국산품애용 등을 골자로 하여 전개되었으나, 그러한 사회·문화적 풍조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구조적 배경에서 유래되는가 하는 데 대한 인식을 결여한 낭만적,

계몽주의적 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학원민주화운동과는 달리 국민계몽대의 활동과 신생활운동은 학생들의 사회참여 행위로서 권력당국과 다소간 갈등도 불러일으키기는 했으나, 구조적 모순의 한 표현으로서 정신적, 문화적 타락을 개개인의 자각과 주인의식의 함양을 통해서 성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점진적 변혁을 도모하는 개량주의적 운동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완된 국가권력하에서 급격히 분출되는 민중들의 욕구를 수렴하기에는 너무나 나이브한 운동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운동이 갖는 한계는 7월 총선에서 혁신당이 참패한 사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분명히 인식되었다.

3) 운동의 진전 — 통일논의의 전개

4·19 직후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학생들은 7·29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반혁명세력의 의연한 존속, 4·19범법자와 부정축재자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기성 보수야당의 무능력,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들이 기대한 바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과제의 궁극적 해결은 민족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기존의 보수야당 및 행정관료들로 이루어진 해계모니집단이 이승만의 자유당 일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급적 기반에 있다는 생각은 '세대의식'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기성세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보수정권에 대한 적대의식이 우회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혁신당에 대한 선거운동, 신생활운동 등의 개량적인 문화운동으로 그들의 정치적 진출을 완결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급기야 민족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고 1960년 8월 18일 발족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단시일내에 중앙의 9개 대학과 지방의 4개 대학으로 조직을 확대하였고 1961년 5월, 5·16 발생 직전에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으로 발전된다.

4·19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순의 뿌리가 분단국가의 특성에서 유래되는만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신식민지사회,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인 분단사회에서 민주변혁운동의 완수는 곧 민족통일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그런 까닭에 민주변혁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청, 즉 민족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지배계급의 기반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과 UN의 주선하에 탄생하여 UN의 결정에 민족의 진로를 내맡기고 있었던 단정세력의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분단하에서 과거 식민지시대에 누렸던 기득이익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한 친일세력의 물적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일·보수집단의 반응 또한 단순한 후배·젊은이에 대한 질책의 차원이 아니라 적대세력에 대한 거부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통일논의가 제기되자 집권세력인 민주당은 “한국은 UN과 협조하여 통일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통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UN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당시 「동아일보」는 “학생다운 순진성을 지녔더라면 차라리 현실서를 부정하는 공산분자로 자처하고 나서라”고 외치면서, 4·19 당시 학생들에게 보여 준 찬사를 완전히 철회하고 이들을 공산주의자와 동일시하여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기성세대에 대한 분단의 책임추궁, 패배의식의 불식의 요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지배계급이 아닌 기성세대 일반에 대한 당돌한 젊은이들의 도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갖는 객관적·사회구조적 의미는 단순히 세대간의 갈등이 아니라 친미, 친일, 단독정부 옹호세력 일반에 대한 민중들의 도전이었다.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1961년 5월 3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고 5일 발기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남북한 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과 민족통일운동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해 줄 것을 호소하였는데, 이것을 둘러싼 시비는 5·16 이틀 전인 5월 14일 절정에 달했다.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5월 12일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이를 강행함으로써 집권능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용공분자로 낙인찍은 학생들의 배후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운동의 자연사적 성장체도에 따른 4·19 이후의 계몽적, 엘리트주의적 학생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4·19 이전 1950년대 말부터 존재하였던 비교적 선진적 인식을 가진 학생 지하조직인 ‘신진회’ 멤버가 그것의 핵심적인 역할

을 하였다.

신진회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비밀조직이었는데, 4·19 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사회과학서적을 돌려 읽음으로써 상당히 선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4·19를 통하여 정치권력이 이완되고, 4·19 이후의 개량주의적 학생운동이 벽에 부딪치자 새로운 학생조직의 결성에 이 멤버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멤버는 이후의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1961년 2월 한미행정협정반대운동에서 포현한 것처럼 미국과 UN의 지원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분단하의 지배집단의 반민주성, 반민족성 및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4·19의 민주변혁의 문제제기는 민족통일의 완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5·16 이후 혁명재판소에서의 유근일의 진술에서 보여지듯이 이들은 제3세계 비동맹국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기운과, 냉전질서의 점진적 와해를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조건 속에서 4·19를 파악하고 있었다.

민족통일의 문제제기에서 총괄된, 민주주의변혁·반외세·민족통일의 요구는 일부 독점자본가, 친일엘리트, 극우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변혁의 객관적인 과제였고, 그것은 다름아닌 4·19의 주체인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반민주세력의 위기의식과 단합을 촉진하여 결국 5·16 군사쿠데타로 귀결된다. 따라서 권력의 헤게모니는 분단사회를 유지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집단인 군부에게로 전이되고 학생, 진보적 지식인은 정치의 장에서 거세되고 민중의 계급적 진출은 좌절을 맛보게 된다. 당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반외세·민족통일을 통한 식민지유제의 청산과, 자주적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변혁운동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전략적 청사진 속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문제제기만으로도 기존 지배계급을 공포에 떨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3. 4·19운동의 주체와 이념상의 제문제

4·19의 전개는 학내문제 → 정치·사회적 문제로 이슈를 변화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4·19) → 학내문제, 정치·사회적 문제 → 민족문제로 이슈를 발전시켜 나갔고 처음부터 강한 정치지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정치지향성이라는 것도 제도정치상의 부분적인 개량,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사회구성체의 응집체로서의 정치권력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존 정치권력에 대한 적대적 부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회성원 대부분(민중)의 '대리자'로서 학생이 갖는 위치는 여기서 구해질 수 있다.

4·19에서 등장한 학생세력을 볼 때 하나의 부문 사회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여타 사회집단 특히 민중의 '대리자'로서의 학생의 측면에 보다 강조점이 주어져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흔히 지금까지의 4·19연구에서는 여타 사회집단이 조직화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세력이 결집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이 정치의 장에 등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민중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학생의 등장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민중의 정치적 비결집과 학생의 등장은 필연적인 함수관계를 갖지 못한다. 학생의 등장과 민중의 계급적 비결집은 오히려 하나의 객관적 사실의 두 가지 표현일 따름이다. 즉, 민중이 성장하지 못했으므로 학생들이 정치의 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민중이 가장 억압받는 계층이면서도 능동적 운동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이들의 임무를 대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생이라는 존재가 계급관계 밖에 존재한다고 하여 학생의 등장을 계급관계와 무관한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비과학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19를 계급관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구성체 전반의 변혁의 계기로 파악하지 않고 반독재민주화라는 정치형태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학생·지식인을 사회관계·계급관계의 진공 속에서 파악하였다. "학생은 가장 정의롭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가장 직선적이기 때문에

……”라는 수많은 설명들은 사실, 4·19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들은 변혁의 과제가 생산관계의 직접 담당자인 민중들의 손에 넘어가자마자, 그것을 비순수하며 학생들의 정신을 흐리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변혁을 학생들의 문제제기의 수준에 국한시키려는 지배블럭의 계급의식의 사실상의 표현인 것이다. 4·19에 대한 이들의 찬양(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은 사실상 4·19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축소, 왜곡인 것이다.

왜 학생들이 민중들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대리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구성체 전체의 수준에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의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체 전체 수준에서의 변혁적 과제는 분단국가라는 객관적 현실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즉 그것은 국가형성의 신식민지적 특성, 혹은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로서의 분단국가의 성립을 의미하는데, 정치권력의 기반이 국내의 계급갈등의 산물로서 순수하게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국가의 간섭의 가장 적 극적인 형태인 군사적 점령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계급갈등은 정치의 장에서 배제되고,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모순은 정치구조의 위기로 직접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형태로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국내 정치구조의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지만, 그것이 곧 반대세력에 의한 국가 전복의 가능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이 지배체제는 국내의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구구에 의해 유지, 재생산되기 때문에 분명히 식민지적 지배가 국내 지배계급에 의해 관철되는 새로운 식민지적 지배형태의 일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내부의 모순 해결이 변혁의 1차적인 과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질서의 물적, 이념적 기반이 신식민지 세계체제를 유지하는 외부적 강대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지배세력은 통상 종주국의 지배엘리트에 비해 훨씬 협소한 자율성을 가질 따름이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의 군사력이 집단안보체제의 유지라는 이유하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적·정치적 자율성의 폭이 지극히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로운 지배자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국내의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서 쟁취한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외양에 있어서만 민주적일 따름이었다.

이미 해방 당시부터 민족부르조아지는 민주주의 변혁세력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하였다. 민중의 헤게모니하에서 결성되어야 할 민족통일전선의 범위에 있어서 민족부르조아지의 현실적인 힘은 별로 기대할 바가 없었다. 일제의 폭압적인 직접지배와 대륙침략을 위한 전시경제체제하에서 민족부르조아지는 민족해방운동의 선상에서 일찍부터 탈락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의 영세자본가를 제외하고는 일제 말에 대부분의 자본가가 식민지권력과 야합하였고, 민족자본가를 주축으로 한 민주변혁과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는 오로지 소수 우익 민족운동가들의 정치이념에서만 표현될 뿐이어서 강력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민주변혁의 주도권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이것을 위한 민족통일전선의 수립은, 현실적으로는 좌익만의 통일전선으로 될 소지를 애초부터 안고 있었다.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식민지권력의 지배를 받은 경우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변혁의 헤게모니는 민족부르조아지의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밑으로부터의 민족통일전선 결성에 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배질서는 파쇼하의 법령과 같이 전사회를 질식시키는 비민주적인 법에 의해 유지되었고, 민주변혁과 민족해방의 수행이라는 객관적 요청은 국가의 지배력이 가장 미약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학생집단에 의해 표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제기된 민주주의 실현의 요청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실천하자는 것이 아니라, 8·15 이후 여러 조건에 의해 유산된 민주주의변혁을 완수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정치권에서 배제된 민중운동을 다시 정치무대에 올려놓겠다는,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를 그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리겠다는 운동인데, 이것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확립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이식된 민주주의제도를 주체적으로 소화, 흡수하여 생산력의 발달과 계급운동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시도이다.

학생들의 구호가 애초부터 이와 같은 목적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갖는 객관적인 의미마저 말살할 필요는 없다. 4·19의 사건은

4·19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처음에 소박하게 제기하였던 민주주의의 구호는 점차 구체적 내용을 획득해 나가고, 급기야는 사회 전체의 재조직의 차원으로까지 발전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화된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었고 총체적 변혁의 한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실제로 4·19 이전에는 한해 약 30건에 불과하던 노동쟁의가 4·19 이후 한해 동안 189건으로 증가한다. 노동조합의 수도 4·19 이전에는 621개에 불과했으나 4·19 이후 821개로 증가하여 노동자의 조직화는 분단 국가의 비민주적 억압기구의 규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4·19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분단 국가의 성립과 6·25전쟁에 의해 잠재워진 적대적인 대립관계가 재연되었고 7·29선거 당시에는, 친일파·민족반역자 및 이승만 정권하에서 기득권을 누린 엘리트의 퇴진 요구가 전국 각지에서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해방정국에서 보여준 첨예한 계급갈등을 재연하는 것이었다. 노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와 새 노동단체 건설의 움직임, 식민지 경찰의 퇴진과 경찰 민주화의 요구는 4·19의 전개가 반식민주의적 민주주의변혁으로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국가기구의 이완과 사회 제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한 4·19 직후의 학생운동은 8·15 직후 제기되었다가 유산되어 버린 일반 민주주의의 과제를 아래로부터 수행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생, 지식인 등 인텔리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민중의 계급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하여 그들을 정치의 장에 다시 진입시키려는, 말하자면 민중들에게 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운동이었고 이러한 민주변혁의 추진은 문제의 근원인 민족통일의 과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었다.

4. 4·19 학생운동의 한계 및 이후의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

4·19의 한계는 학생운동 일반이 갖는 한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학생은 생산 제영역에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므로 그들의 운동은 언제나 여타 계급운동과 접맥될 경우에만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생은 민중들을 각성시키고, 기존 지배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계몽적, 폭로적 운동에 스스로를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민중조직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민중으로 존재 전이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활동은 학생운동의 일환으로서만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학생은 비록 이념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정치적인 테크닉 면에 있어서 기성 정치인보다 훨씬 미숙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학생의 정치참여시 학생운동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정치권력을 접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변혁의 서곡은 기성 제도권 정치인에 의해 수습된다. 이들 기성 제도권 정치집단——근본적으로는 자유당과 동일한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는——은 정치권력의 공백을 채우는 주체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변혁운동이 계속 발전되는 것을 미봉적인 수습책을 동원하여 저지하였으며 국가 권력이 위축되고 시민사회가 팽창하여 민중들이 계급으로서 각성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승만의 하야로 대부분의 학생은 애초의 타도대상을 제거한 셈이 되었으므로, 학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운동의 주체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행동을 정당하다고 간주했다. 정치현실에 참여하여 정치변혁을 이루어 내고 많은 희생까지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돌아가 학내문제에만 관여해야 한다는 논리적 자기모순이야말로 민주당세력이 변혁운동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포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4·19과정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그룹은 4·19는 완수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의사당점거, 악법반대투쟁 등 과격한 방법으로 운동을 진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세력의 헤게모니에 의해 재편된 정치구도는 민주화에 대한 환상을 유포시켜서 운동을 계속 진행시키려는 집단을 고립·분열시켰다. 선진적인 학생들은 운동의 주체로서 대단한 긍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사회 전체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은 학생뿐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당시 학생 일반이 견지하고 있었던 매우 엘리트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권력은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여론형성에 의해 무너질 정도로 위약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선도적 문제제기로 국민들의 공감을 호소함으로써 이승만의 하야와 같은 정치적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믿었으나, 정치

권력을 유지해 가는 사회경제적 토대, 국가기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지극히 낭만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산계급의 힘과 역할에 대한 인식에는 현저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단하에서 민주주의혁명의 철저화는 곧 민족통일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올바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대의 변화가 없는, 즉 민중이 이 운동의 주체로서 성장하지 않는 한 언제나 미봉적인 개량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4·19의 주체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시대 이후 단절되어 온 민중주체의 변혁운동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운동이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사회구조의 변혁의 차원에서 보면 학생집단은 보조세력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적 변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선도적인 집단으로 기능하여 여타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 된다. 즉 한국 사회의 유산된 민주변혁의 지평은 학생집단의 이데올로기투쟁에 의해 끊임 없이 공간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학생집단 단독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민주변혁은 학생운동의 선도적 문제제기와 생산계급의 정치적 진출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학생·민중의 연합은 4·19 이후 지금까지 변혁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4·19 당시의 학생들의 운동주체로서의 긍지는 다소 변형된 모습이긴 하나 유지되고 있다. 변혁운동이 학생집단에 의한 문제제기를 통해 추진되고, 기존의 지배블록이 이들을 다른 어떤 세력보다 적대시한다면 학생과 기성 지배집단간의 갈등은 단순히 문화적 갈등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총체적 갈등의 표현인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은 단순한 정치투쟁, 이슈 싸움(issue fighting)으로서의 성격을 지양하고 학생이 민중의 정치적 각성과 계급으로서의 자각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대두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운동이 민주변혁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에도 일정한 기능을 행사하고 장차 전위형성의 매개물로서도 기능해야 한다는 의식의 심화이자 운동의 발전의 표현인 것이다.

민중운동,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의 제고는 곧 4·19 당시의 선배들에 대한 이후의 학생 자신들의 비판·극복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4·19에서 출발한 민주주의변혁은 기존 정치적 지배질서를 와해시키는 정치투쟁과, 그것을 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주체의 형성에 의해서만 완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변혁은 언제나 정권담당자의 교체로 끝날 것이고 기존의 정치인이 사태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운동의 주체를 무력화시키고 변혁운동의 진전을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이러한 대중조직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임무 중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학생운동의 성격과 위상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쟁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본격화되고 있지만 그 논쟁을 촉발시킨 실천적 경험은 4·19 당시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5. 맺음말

4·19는 분단에 의해 단절된 변혁운동의 흐름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해방 이후 사회변혁운동은 모두 4·19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4·19는 운동의 종결이 아니라 운동의 시작이다. 4·19의 진전은 보수적인 민주당 정권과 군부엘리트에 의해 저지되었으나, 이후의 민주화운동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간다. 4·19는 분단하에서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변혁의 요청은 민족통일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변혁운동의 과제가 아직 민주주의변혁단계에 있다는 것을 예증하는 것이며, 완전한 민족해방을 성취하지 못하는 신식민지적 지배논리가 의연히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19는 분단사회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노정된 중요한 역사적 계기이다. 4·19라는 열려진 공간, 즉 국가권력이 이완되고 계급투쟁이 다시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공간이 친미 보수엘리트, 과거의 민족반역자, 식민지시대의 관료들에게는 지극히 위협스럽게 보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4·19 직후와 10·26 직후는 8·15 이후의 해방정국과 함께 모두 이러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면에서 비로소 계급관계는 정치현실

에 정확히 반영되고, 학생이라는 보조자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표출시킬 필요없이 직접적인 담당자의 손에 맡겨질 수 있게 된다. 이때 학생운동은 민중운동의 보조세력으로서 그 고유한 기능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신식민지적 사회현실에서 학생은 서구의 학생들과는 다소 상이한 위치를 갖는데, 그들은 계급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사회 제계급의 불만을 수렴하여 표출하는 창구이자 대리자이다. 학생운동의 이러한 성격은 4·19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은 4·19 이후 수 차례의 많은 정치적 변혁이 이루어졌지만 운동의 본질적인 과제는 의연히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19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역사는, 서구에서의 학생운동의 사실상의 소멸이라는 성공적인(?)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배집단의 전술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운동의 현상태에만 집착하여 전체 사회적 모순의 표출로서 그것의 발생이 갖는 의의를 놓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

**역비
재의**

한국 근현대 연구입문

4

19세기, 일제, 해방후 각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학·운동사 등, 한국 근현대사 각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역사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학술강연회 강연집

— 이이화·안병욱·강만길·김 철·이대근·박현재·
김진균·최장집·김남식 편 — <값 2,800 원>